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문제는 가리고 결과는 부풀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날 짜 2015. 2. 18. (총 8 쪽)

논 평

문제는 가리고 결과는 부풀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세분화된 항목으로 실태조사하고서도 공개 않고 결과만 과대포장 재탕되는 계획, 강제성이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대책 비정규직 신규채용 근절, 전환대상의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1. 고용노동부는 문제와 그 원인은 가리고 결과만 부풀려 선전하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노동조건 등을 세분화된 항목으로 고용형태 별로 구분하여 조사했지만, 어제(2/17)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은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과제의 해결은 해당 문제의 실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유에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재탕되고 있는 계획과 결과를 과장한 성과를 공개하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공개하고 해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공공부문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201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 대학 등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인원, 임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실적 등('15.12.31 기준)을 조사했음을 확인했다(이하 실태조사, <별첨자료 1> 참고). 실태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매우 세분화된 조항을 통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형태를 단시간, 기간제, 기타 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으로 세분화한 뒤, 남녀로 구분하여 그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표1> 참고). 또한,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혹은 근속년수)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1>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인원 현황 조사표

단시간		기간제						기타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교원·공무원 •직원 등*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1년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등 공공부문에서 고용한 정규직의 부문 별 명칭임.

인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확인함에 있어서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 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통해 임금, 상여금, 주 소정근로시간과 교육훈련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표2>, <표3> 참고)

<표2>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비정규직’ 노동조건 조사표

직 종	비정규직 인원			일시간 월 업무 종사자 (B)	상시지속업무 종사자(C)=a+b			임 금 (월, 만원)	상 여 금			주 소정 근로 시간	교육 훈련 실시 유무	복지포인트		
	합계 (A)=B+C	남성	여성		전환제 외 인원합 계(a)	전환제외 상세사유	전환 대상 (b)		정원상 직원 지급여부	지급 인원	금액 (연, 만원)			정원상 직원 지급여부	지급 인원	금액 (연, 만원)

<표3>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무기계약직’ 노동조건 조사표

직 종	무기계약직 인원			임금		상여금		근속수당		주 소정 근로 시간	교육훈련 실시유무	복지포인트	
	합계 (A)=B+C	남성	여성	금액 (연, 만원)	임금체계	지급 인원 (연, 만원)	금액 (연, 만원)	지급 인원 (연, 만원)	금액 (연, 만원)			지급 인원 (연, 만원)	금액 (연, 만원)

고용노동부는 전환계획 대비 전환결과 비율이 100%가 넘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자화자찬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공공

부문 2단계(‘16~’ 17년) 전환계획’(<별첨자료 3> 참고)을 보면 공공부문 827개 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는 203,864명, 전환제외는 185,447명, 전환계획은 18,417명이다. 비정규직 전체에서 10%에도 못 미치는 인원만이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으며 이 질문은 합리적이며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90%가 애초에 전환에서 배제되거나 전환대상인 상시·지속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전환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거나 전환조건을 내세우며 합법적으로 전환을 회피하는 꼼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전환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전환예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지속업무종사자를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전환대상을 확대하고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오직 10% 남짓한 비정규직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현실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3.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의 공시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http://goo.gl/ZjeoQ4>, <별첨자료 2> 참고)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관리목표를 이미 하회하고 있다. 2015년 4분기,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의 정원은 5,501명, 무기계약직의 정원은 426명, 기간제노동자 293명을 고용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포함 직원 정원 대비 기간제노동자 비율은 4.94%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간제노동자 모두가 상시·지속업무종사자가 아니라면 비율은 더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즉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비율을 상회하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 계획에서 확인하기 어렵

다. 각 기관이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제도시행 원칙 하에 추진함으로써 목표관리제 준수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오히려, ‘한시적 업무, 일시간혈업무 및 업무성격 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상기 5%·8% 범위 내 운영기준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 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해고나 풍선효과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감소시킬지는 의문이다. 기간제노동자와 정규직 인원 간의 상대적인 양적을 조절해보겠다는 계획보다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을 막고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하다.

4. 어제 발표한 계획 중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없지 않다. 비정규직 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없거나 공공부문 소속 기관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노동자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은 어디에 어떤 이유로 고용되어 있으며, 전환율은 왜 이리 작은지, 전환예외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공론의 장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방기이다. 끝.

- 별첨자료 1. < '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계획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상 근로복지공단 인원현황 공시자료
관련 링크: <http://goo.gl/ZjeoQ4>
 3. 공공부문 2단계('16~' 17년) 전환계획. 2015.02.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관련 링크: <http://goo.gl/ZO83JC>

<별첨자료 1> <'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계획

'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 (조사내용) 기간제 등 비정규직 인원, 임금,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실적 등

☐ (조사기간) '15.12.7~12.18 ('15.12.31 기준)

☐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 대학 등 833개* 기관

* '15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한국거래소, 한국표준협회, 인천 종합에너지, 코스콤 제외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본청)에서 소속기관 현황 취합·입력

☐ (조사방법) 833개 기관별로 중앙기관에서 소속기관 현황을 취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

* <http://public-survey.moel.go.kr>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본청)에서 소속기관 현황 취합·입력

• 지방자치단체: 시·도·특별자치도(시) 및 시·군·구(자치구)에서 소속기관 현황 취합·입력

• 시·도 교육청: 시·도·특별자치도(시) 교육청은 소속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할 지역내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 자료를 1차 취합하도록 한 후, 시·도 교육청에서 소속 교육지원청 자료를 최종 취합·입력

• 국·공립 대학: 본교에서 분교 현황 취합·입력(부설 초·중·고등학교 포함)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본사·본원에서 지사·지원 현황 취합·입력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54, 7656, 7670, 7650, 7651, 7666)

〈별첨자료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상 근로복지공단 인원현황 공시자료

관련 링크: <http://goo.gl/ZjeoQ4>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1	1	1	1	1	1
		비상임	0	0	0	0	0	0
	이사	상임	4	4	4	4	4	4
		비상임	10	10	10	10	10	10
	감사	상임	1	1	1	1	1	1
		비상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상임임원계(A)		6	6	6	6	6	6
직원	정원		5,045	4,918	5,206	5,363	5,437	5,501
	현원(B)		5,115	4,934	4,850.75	5,104	5,217.29	5,276.04
무기 계약직	정원		0	0	0	0	426	426
	현원		74	76	148	161	332.4	345.32
비정규직	기간제		276	493	522	687	313	293
	단시간		0	0	176	180	0	16
	기타		0	0	0	0	0	0
소속외 인력			541	601	805	820	886	981
임직원 총계 (A+B)			5,121	4,940	4,856.75	5,110	5,223.29	5,282.04
여성 현원			2,727	2,678	2,571.5	2,702	2,801.91	2,854.28

<별첨자료 3> 공공부문 2단계(‘16~’ 17년) 전환계획. 2015.02.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관련 링크: <http://goo.gl/ZO83JC>

구분	대상기관	비정규직	전환제외	전환대상	전환시기		
					‘15년 下 (기 전환)	‘16년	‘17년
합계	827	203,864	185,447	18,417	3,155	10,085	5,177
중앙부처	48	14,612	12,320	2,292	657	950	685
자치단체	245	49,027	45,388	3,639	831	1,625	1,183
공공기관	315	42,167	38,772	3,395	1,430	1,532	433
지방공기업	142	8,038	6,655	1,383	159	819	405
교육기관	77	90,020	82,312	7,708	78	5,159	2,471